
“소비자의 날 기념”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 ▣ 일 시 : 2017. 11. 30. (목) 15시
-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 주 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회의원 이학영더불어민주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Korea National Council of Consumer Organizations

“소비자의 날 기념” 소비자 집단소송법 도입을 위한 토론회

- 일 시 : 2017. 11. 30.(목) 15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순 서

사회 : 변웅재 변호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시 간	내용	발제자 및 토론자
15:00 ~ 15:20	개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 •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5:20 ~ 16:00	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희석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00 ~ 17:00	토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 최승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 • 강석구 팀장(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 • 김정환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 남동일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 김봉진 검사(법무부 상사법무과)
17:00 ~ 17:10	질의응답	

[발제 - 발제문]

소비자 집단소송법안

—소비자단체형 집단소송제도의 제안—

서희석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비자 집단소송법안

-소비자단체형 집단소송제도의 제안-

2017.11.30.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희석

목차

- I. 집단소송제도의 입법모델과 비교법적 현황**
- II. 우리나라 입법론의 전개**
- III. 대표당사자형 집단소송제도의 문제점**
- IV. 소협안의 특징**
- V. 개별조문안의 검토**
- VI. 결론**

I. 집단소송제도의 입법모델과 비교법적 현황

- 1. 입법모델의 결정요소
- 2. 비교법의 최근동향

I. 집단소송제도의 입법모델과 비교법적 현황

- 1. 입법모델의 결정요소
 - 원고적격(제소권자)
 - ✓ 대표당사자형
 - ✓ 제3자소송담당형
 - ✓ 융합형
 - 피해자의 소송관여 형태
 - ✓ opt-out형
 - ✓ opt-in형
 - 소송의 단계
 - ✓ 1단계형
 - ✓ 2단계형

원고적격(제소권자)에 따른 유형

	대표당사자형	제3자소송담당형		융합형
		단체 + 공적기관형	단체형	
해당 국가	미국(1966), 호주(1991), 캐나다 온타리오주 (1992)	브라질(1990)	일본(2013), 프랑스(2014)	스웨덴(2002), 덴마크(2008), 노르웨이(2008)

- <출처> 졸고, "집단소송법의 제정방향-한국형 집단소송제도의 설계", 소비자법연구 제3권 제1호(2017.3), 109면

2017-11-30

PNU School of Law Seo©

5

피해자의 소송관여형태에 따른 유형

	opt-out형	opt-in형	병존형
해당 국가	미국(1966), 캐나다 퀘벡주(1979), 호주(1991), 캐나다 온타리오주(1992)	브라질(1990), 스웨덴 (2002), 그리스(2007), 이탈리아(2010), 일본 (2013), 프랑스(2014)	덴마크(2008), 노르웨이 (2008) *opt-out은 소액청구에만 인정

- <출처> 졸고, "집단소송법의 제정방향-한국형 집단소송제도의 설계", 소비자법연구 제3권 제1호(2017.3), 111면

2017-11-30

PNU School of Law Seo©

6

소송의 단계에 따른 유형

	1단계형		2단계형 (급부판결형)
	총액판결형	급부판결형	
해당 국가	미국(1966), 호주(1991)	스웨덴 (2002), 덴마크 (2008), 노르웨이(2008), 이탈리아(2010)	캐나다 퀘벡주 (1979), 브라질 (1990), 캐나다 온타리오주(1992), 그리스(2007), 일본(2013), 프랑스 (2014)

- <출처> 줄고, "집단소송법의 제정방향-한국형 집단소송제도의 설계", 소비자법연구 제3권 제1호(2017.3), 112면

2017-11-30

PNU School of Law Seo©

7

국가별 집단소송제도의 유형

	미국형	캐나다형	스웨덴형	일본형
제소권자	대표당사자형	대표당사자형	융합형	제3자소송담당형
소송관여	opt-out형	opt-out형	opt-in형	opt-in형
소송단계	1단계형 (총액판결형)	2단계형	1단계형 (급부판결형)	2단계형
입법례	미국, 호주, 한국(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캐나다 퀘벡주 · 온타리오주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 아(대표당사자형)	브라질(단체+공적 기관형), 일본 · 프 랑스(단체형)

- <출처> 줄고, "집단소송법의 제정방향-한국형 집단소송제도의 설계", 소비자법연구 제3권 제1호(2017.3), 115면

2017-11-30

PNU School of Law Seo©

8

I. 집단소송제도의 입법모델과 비교법적 현황

- 1. 입법모델의 결정요소
- 2. 비교법의 최근동향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2017-11-30

PNU School of Law Seo©

9

주요국 집단소송제도의 최근 동향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제도모델	대표당사자 소송	대표 소송	집합소송 (표본소송)	집단소송 (경쟁법)	투자자-표본절차	표본확인 소송법안	소비자단체형 집단소송	소비자단체형 집단소송
원고적격	대표당사자 (구성원)	대표자	당사자 (구성원)	대표자 (제3자가능)	표본원고 (구성원)	적격단체 (제3자)	적격소비자단체	적격소비자단체
피해자 소송관여	opt-out	opt-out	opt-in	opt-in/out (법원선택)	opt-in	opt-in	opt-in	opt-in
집단인증	필요	-	필요 (GLO)	필요 (CPO)	-	-	불요	불요
소송단계	1단계 (총액판결)	1단계	1단계	1단계	1단계 (2단계 개별)	1단계 (2단계 개별)	2단계	2단계
청구 (소송물)	· 손해배상 · 행위금지, 확인	· 손해 배 상 · 은 예외적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행위금지	확인	확인	· 1단계:확인 · 2단계:손해배상	· 1단계: 확인 · 2단계: 금전배상
적용범위	민사일반	민사일반	민사일반	경쟁	자본시장 (증권)	소비자	소비자 1인 조건, 노동, 환경, 개인정보보호로 확대	소비자

- <출처>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일본의 소비자집단소송 제도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연구보고서(2017-15), 98면.

2017-11-30

PNU School of Law Seo©

10

II. 우리나라 입법론의 전개

- 1. 입법현황 및 국회제출법안
- 2. 현재 논의상황
- 3. 입법론의 특징

2017-11-30

PNU School of Law Seo©

11

II. 우리나라 입법론의 전개

- 1. 입법현황 및 국회제출법안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2004.1.20.제정, 2005.1.1.시행
 - 증권관련집단소송: 증권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 17대 국회(2004.5~2008.5): 5개안
 - 식품안전기본법(3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집단소송법
 -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단체소송제도+집단분쟁조정제도
- 18대 국회(2008.5~2012.5): 4개안
 - 집단소송법, 식품안전기본법, 불법집단행위소송법,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 19대 국회(2012.5~2016.5): 17개안
 -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집단소송법, 집단소송법, 공정거래법(4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 신용정보보호법 등
- 20대 국회(2016.5~): 5개안
 - 소비자집단소송법(2개), 집단소송법, 공정거래법(2개)
-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참고한 **대표당사자형 집단소송제도를 추구**

2017-11-30

PNU School of Law Seo©

12

II. 우리나라 입법론의 전개

- 2. 현재 논의상황(정부)
-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체계개선 TF
 - **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 공정거래분야(담합 등)+소비자 분야(제조물책임, 표시광고)에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당사자**가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 법무부: 집단소송제도 개선위원회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
-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참고한 대표당사자형 집단소송제도를 추구**

2017-11-30

PNU School of Law Seo©

13

II. 우리나라 입법론의 전개

- 3. 입법론의 특징
- 대표당사자형 집단소송제도(미국형 제도=class action 제도)를 당연한 전제로 삼음
 - 대표당사자형+opt-out형+1단계형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효율적인/손쉬운 입법모델
 - 민사소송법의 특칙+완결된 법률 형태+소송 실적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 개별법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공정거래법, 식품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 일반법 제정안: 집단소송법, 소비자집단소송법

2017-11-30

PNU School of Law Seo©

14

III. 대표당사자형 집단소송제도의 문제점

- **1. 총원 범위확정의 불명확**
 - 개별 피해자의 소송 참가의사가 불명확한 상태에서의 소송수행
 - 집단(class)의 확정(certification)절차 필요 → 소송허가절차
 - 적극적인 소송 참가의사(opt-in)가 아닌 소극적인 제외신고(opt-out)를 통한 소송수행 → 제외신고를 하지 않으면 총원의 범위에 포함됨
- **2. 소송의 장기화**
 - 총원 범위의 확정을 위한 대표당사자 변호인의 사전 작업이 사실상 필요
 - 소송허가 결정을 위한 재판: 3심 구조(즉시항고 → 재항고)
 - 본안소송: 3심 구조 → 사업자의 책임여부 판단(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등)
- **3. opt-out형 제도의 이론적 문제점**
 - 총원범위 확정절차에서의 문제 → 마지막까지 총원범위가 유동적일 수 있음
 - 판결의 효력(기판력) 확장의 이론적 근거가 불명확 → 소송 참가의 의사·행동·표시가 부재
 - 원고패소 시 총원에 포함된 자(구성원)의 재판청구권 박탈의 문제가 현출될 가능성 → 헌법의 문제
- **4. 개별적 권리확정의 곤란**
 - 피해구제제도로서의 총액판결(1단계)형 제도의 문제점 → 개별적 권리확정절차+분배절차가 필요
 - 공통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개별쟁점은 다를 수 있음 → 인과관계, 과실상계, 손해액 등
 - 피해자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한 간이한 권리구제절차 필요

2017-11-30

PNU School of Law Seo©

15

IV. 소협안의 특징

◆ 입법모델: 소비자단체형 집단소송제도

- **1. 원고적격: 제3자소송담당형**
 - 소비자단체+시민단체
 - 한국소비자원 → 부권소송적 요소
- **2. 피해자의 소송관여: 변형된 opt-in형**
 - 원고단체가 승소한 경우에만 2단계 절차에 참가
 - 재판청구권 박탈문제의 해결
- **3. 개별적 권리실현절차의 마련: 2단계형**
 - 1단계: (사업자의) 공통의무의 존재 확인소송=공통의무확인소송
 - 2단계: (채권신고를 통한) 간이한 채권확정절차=채권확정절차

2017-11-30

PNU School of Law Seo©

16

IV. 소협안의 특징

◆ 적용범위 및 대상

• 1. 인적 적용범위: 소비자 일반

-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계약·불법행위에 포괄적용
- B2B유형은 적용제외 → 집단소송제도에 적합?

• 2. 대상사안(소송물): 금전지급청구

- 손해배상청구: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 계약이행청구: 사업자의 계약상 의무이행청구
- 부당이득반환청구: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등

• ➔ 소비자가 피해자인 모든 금전지급청구를 포괄적인 대상으로 함

2017-11-30

PNU School of Law Seo©

17

IV. 소협안의 특징

◆ 입법형태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신설안)

◆ 장래구상

- 「소비자소송법」 제정안
- 집단분쟁조정+소비자단체소송+소비자집단소송

2017-11-30

PNU School of Law Seo©

18

V. 개별조문안의 검토

- 제1장 총칙
- 제2장 공통의무확인소송
- 제3장 채권확정절차
- 제4장 보칙
- ➔ 총 31개 조문

입법목적

-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시설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소비자계약+사업자의 불법행위
- 다수 소비자피해의 효과적 구제
-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특칙

정의규정

- 제2조(정의) 4. “**소비자집단소송**”이란 이 법에 의한 **공통의무확인소송**, **채권확정절차** 및 **민사집행법에 의한 관련 민사보전 또는 민사집행의 절차**를 말한다.
- **소비자집단소송** = [공통의무확인소송+채권확정절차] + 관련 [민사보전 + 민사집행]의 절차
- **소비자**: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행위하는 자연인
- **사업자**: 법인 기타 단체 + 사업목적으로 행위하는 자연인
- **소비자계약**: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계약

2017-11-30

PNU School of Law Seo©

21

정의규정

- 제2조(정의) 5. “**공통의무확인소송**”이란 **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시설(이하 “재화등”이라 한다)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채무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사업자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공통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거나 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공통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 **적용장면**: ①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시설(불법행위)로 인한 ②다수의 소비자피해의 발생 + 사업자의 다수 소비자에 대한 채무이행의 청구
- **청구(소송물)**: (사업자의) 공통적 금전채무의 존재확인 + (소비자의) 공통적 금전채무의 부존재확인

2017-11-30

PNU School of Law Seo©

22

정의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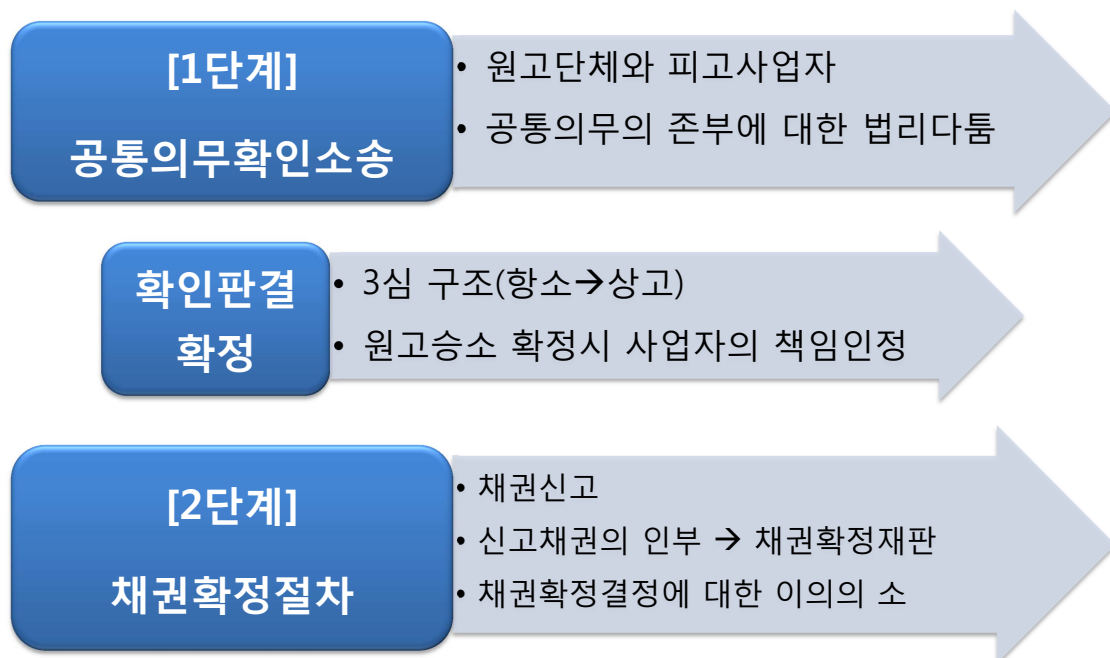
- 제2조(정의) 6. **“채권확정절차”**란 공통의무확인소송의 결과를 전제로 법원에 대한 채권신고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재판절차로서 피해자가 상대방 사업자에게 갖는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및 내용을 확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 **공통의무확인소송의 결과를 전제로**
 - (사업자)공통채무존재 확인 / (소비자)공통채무부존재 확인
 - 확인소송의 인용판결(원고승소)이 확정된 경우
- **채권신고에 기초한**
 - 소비자의 소송참가의사의 표시=채권신고의 수권=opt-in
 - 원고단체 → 법원에 채권신고(일괄신고)
-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및 내용을 확정하는 일련의 절차**
 - 신고채권의 인부(認否) → 채권확정재판
 - 채권확정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2017-11-30

PNU School of Law Seo©

23

소비자집단소송의 기본구조



2017-11-30

PNU School of Law Seo©

24

원고적격

- 제3조(공통의무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등) ① 다음 각호의 자(이하 "단체"라 한다)는 공통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동법 제70조 제1호 가목~다목의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다만 **소비자단체의 협의체**의 경우 동법 제70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2.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가. 「소비자기본법」 제70조 제4호 나목~라목의 요건을 갖춘 것
- 나. 소비자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할 것

◆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의 원고적격자(사업자단체는 제외)

- ①공정위 등록 소비자단체(소비자단체협의체 포함)
- ②한국소비자원
- ③비영리민간단체(시민단체)

2017-11-30

PNU School of Law Seo©

25

피고적격

- ②공통의무확인소송의 피고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사업자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불법행위(민법 기타 법률에서 명문으로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공통의무확인소송의 피고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사업자나 그 채무의 이행을 하는 사업자 기타 **당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인 사업자로** 한다.

• 소비자계약

-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사업자

• 불법행위(법률에서 인정하는 것)

- 소비자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자
- 그 채무의 이행을 하는 사업자
- 기타 당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

2017-11-30

PNU School of Law Seo©

26

전속관할 및 병합심리

- **제4조(전속관할 및 병합심리)** ①공통의무확인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 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공통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여러 개의 공통의무확인소송이 하나의 전속관할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법원에서 병합심리한다.
- ④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여러 개의 공통의무확인소송이 각각 다른 전속관할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먼저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서 병합심리한다. 다만 그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당해 공통의무확인소송의 전부를 다른 전속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여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 **전속관할**
 -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서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선택 가능
- **병합심리**
 - 하나의 법원에 여러 개의 소송 → 그 법원에서 병합심리
 - 여러 법원에 여러 개의 소송 → 먼저 제소된 법원에서 병합심리(신청이나 직권으로 이송가능)

2017-11-30

PNU School of Law Seo©

27

소송의 제기

- **제6조(소송의 제기 등)** ①공통의무확인소송의 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소송을 제기하는 단체(이하 "원고단체"라 한다)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추정되는 피해자의 범위 및 전체 피해액
 4. 청구의 취지 및 원인
- ②공통의무확인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은 5백만원**으로 한다.
- ③원고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장에 그 단체가 본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해당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법원은 피해자의 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피해자에게 공통되었는지 여부, 공통의무확인소송이 피해자의 권리실효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인지 여부, 제11조 이하의 절차에서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적절하고 신속히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공통의무확인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하할 수 있다.
- **인지액 상한: 5백만원**
- **소 각하시 고려사항:** 피해자 수, 쟁점의 공통성, 공통의무확인소송의 적합성·효율성, 채권확정절차의 적절성·신속성 등 → **소송허가절차를 대체**

2017-11-30

PNU School of Law Seo©

28

확정판결의 효력

- 제9조(확정판결의 효력) ①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신고소비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 ②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다른 단체는 공통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난 경우
 2. 기각판결이 원고단체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 청구인용 확정판결 → **기판력의 확장**: 2단계절차(채권확정절차)에 참가하는 소비자(신고소비자)에 효력이 미침 → 변형된 opt-in형
- 청구기각 확정판결 → **기판력의 확장**: 원고적격을 가진 다른 단체

2017-11-30

PNU School of Law Seo©

29

입증책임의 완화를 위한 특칙

- 제7조(정보제출명령) ① 원고단체가 공통의무의 준부를 증명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를 증명하기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제출을 명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제1항의 정보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고에게 그 정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할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비밀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된 정보를 원고단체에게 공개하지 않고 중립적인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④ 피고가 정보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원고단체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명령을 받은 정보를 멸실, 훼손, 은닉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공통의무의 준부에 관한 원고단체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⑤ 정보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원고단체: 피고에 대한 정보제출명령을 법원에 신청
- 피고가 이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정보를 멸실하는 등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 → 원고단체의 주장을 인정

2017-11-30

PNU School of Law Seo©

30

특수한 판결·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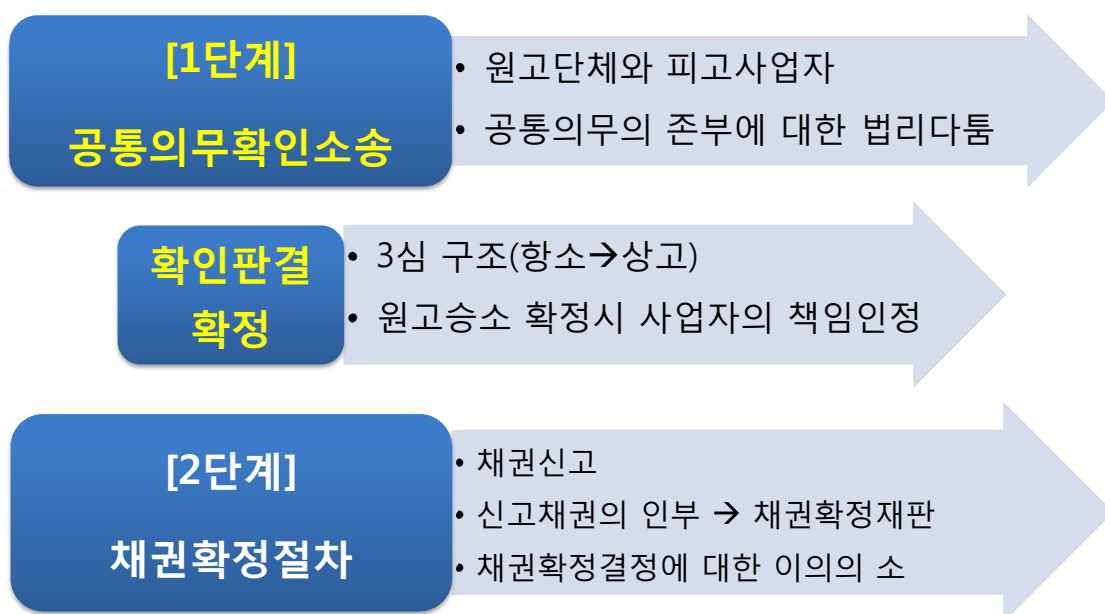
- 제10조(특별지급판결 등) ①법원은 **피해자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고 각 피해액도 동일한 경우**에는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채권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소송참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기간과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② **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공통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제1항 제2문을 준용한다.
- ③법원은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피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때에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8조에 규정하는 채권신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반복적인 위법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 2. 위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 3.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 4. 위법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 5. 위법행위의 기간·횟수 등
 - 6. 피고의 재산상태
 - 7. 피고가 피해자의 피해확산을 방지하거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 ⑤법원은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과 동시에 원고단체 또는 그 소송대리인에게 발생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판결을 할 수 있다.
- **특별지급판결 / 공통금전채무부존재확인판결** → 피해자의 소송참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기간과 방법을 별도로 정함
- **징벌배상제도**: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수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확대손해 발생 → 3배배상제도
- **원고 및 소송대리인의 비용보전판결**

2017-11-30

PNU School of Law Seo©

31

소비자집단소송의 기본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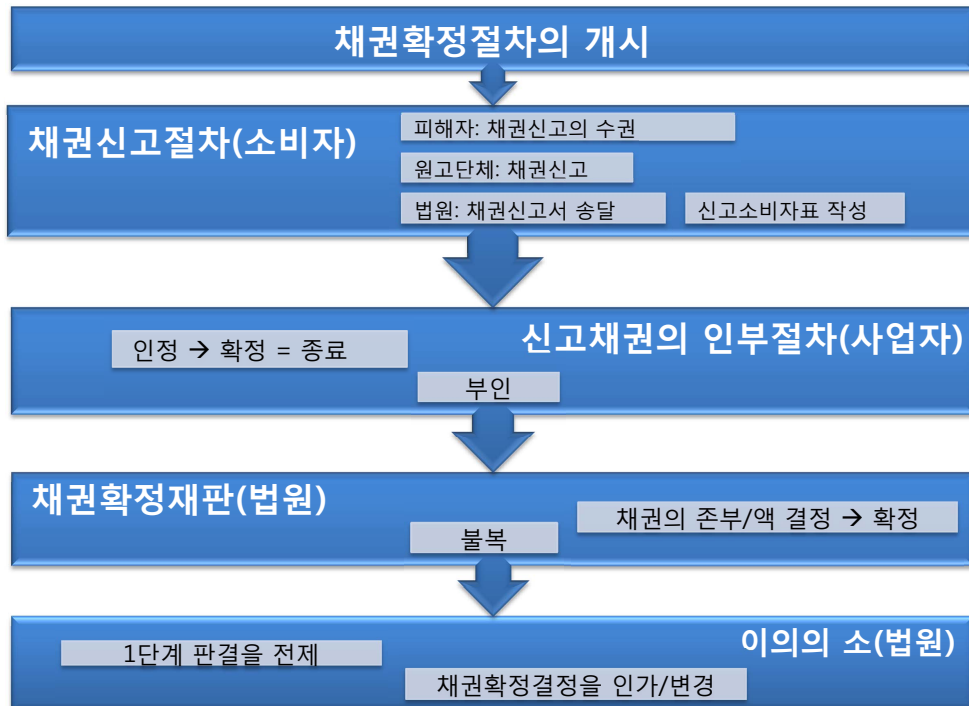


2017-11-30

PNU School of Law Seo©

32

채권확정절차



2017-11-30

PNU School of Law Seo©

33

채권확정절차의 개시

- **제11조(채권확정절차의 개시신청)** ①공통의무확인소송의 당사자인 원고단체는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또는 청구의 인낙이나 공통의무의 존부에 대한 화해로 소송이 종결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1개월의 불변기간** 내에 당해 소송의 제1심 중급판결을 한 지방법원(제1심에서 청구인낙이나 화해로 당해 소송이 종결된 때에는 당해 소송이 계속되고 있던 지방법원)에 당해 소송의 당사자였던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채권확정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채권확정절차 개시신청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채권확정절차의 개시결정)** ①채권확정절차법원은 채권확정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1조 제3항에 규정하는 비용의 예납이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범위를 기재한 결정서로 채권확정절차의 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채권확정절차법원은 채권확정절차의 개시결정과 동시에 피해자의 범위, 사안의 복잡성, 채권확정절차단체의 규모와 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채권확정절차단체가 제4항에 규정하는 채권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간(이하 "채권신고기간"이라 한다) 및 그 채권신고에 대해 채권확정절차의 상대방이 인부(認否)를 하여야 하는 기간(이하 "인부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 **1단계 승소판결 확정 → 채권확정절차의 개시신청(원고단체)**
- **법원: 개시결정 + 채권신고기간 및 인부기간을 정함 → 관보에 공고**

2017-11-30

PNU School of Law Seo©

34

피해자: 채권신고의 수권

- **제14조(채권신고의 수권절차의 개시 등)** ①채권확정절차단체는 피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추정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사항을 **통지**하여 채권신고의 수권(授權)절차를 개시한다.
- 1. **공통의무확인소송의 확정판결의 내용**(청구인낙이나 화해로 당해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안의 내용
- 2. **채권확정절차의 개요**(채권확정절차 신청단체가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고 아울러 채권확정절차를 수행하려면 피해자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를 포함한다)
- 3. **신고 대상인 피해자 및 채권의 종류**
- 4. 채권확정절차단체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 5. 신고 대상인 피해자가 채권확정절차단체에 대해 **채권신고의 수권을 하는 방법**(증거서류가 있는 경우 그 제출방법을 포함한다) 및 기간
- 6. 피해자가 신고대상인 채권에 기하여 사업자에게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고 있을 때에는 채권신고를 할 수 없다는 사실
- 7. 채권확정절차단체가 **보수나 비용을 받는 경우 그 액수 및 산정방법**
- 8. 채권확정절차단체가 채권확정절차 및 관련 민사집행, 화해 등을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지급방법
- 9.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상대방은 채권신고기간 중에 채권확정절차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확보하고 있는 신고 대상인 피해자의 성명, 주소 또는 연락처를 채권확정절차 단체에 공개하여야 한다.
- **채권신고 수권절차:** 원고단체(채권확정절차단체)의 공고/통지 → 피해자의 채권신고의 수권
 - 소송참가의사=opt-in
- **상대방 사업자** → 확보하고 있는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원고단체에 공개해야 함

2017-11-30

PNU School of Law Seo©

35

단체: 채권신고

- **제16조(채권신고)** ①채권확정절차단체는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확정절차법원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를 하는 채권확정절차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채권신고서를 채권확정절차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채권확정절차단체, 상대방 및 채권확정절차단체에 제14조에 규정하는 채권신고의 수권을 한 피해자(이하 "신고소비자"라 한다)
- 2. 신고소비자의 채권액 및 청구원인(청구원인은 공통의무확인소송에서 인정된 공통의무에 관련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원인을 전제로 하는 것에 한한다)
- 3.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③공통의무확인소송에서 제10조 제2항의 선고가 있는 경우 채권확정절차단체는 제2항 제2호의 신고소비자의 채권액을 기재하는 때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④채권확정절차단체는 피해자가 신고대상인 채권에 기하여 사업자에게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고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신고대상인 채권에 관한 채권신고를 할 수 없다.
- **채권확정절차단체** → 법원에 일괄하여 수권한 소비자(신고소비자)의 명단 및 채권액 등을 기재한 채권신고서를 제출 = 채권신고

2017-11-30

PNU School of Law Seo©

36

법원: 신고소비자표 작성 등

- **제20조(채권신고서의 송달)** 채권확정절차법원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서의 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채권신고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21조(신고소비자표의 작성)** ①채권확정절차법원의 서기관·사무관·주사 또는 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채권신고서에 의해 신고된 채권(이하 "신고채권"이라 한다)에 대해 **신고소비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신고소비자표에는 각 신고채권의 내용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신고소비자표의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언제든지 그 기재를 경정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채권신고절차에서 법원의 역할**
 - 채권신고서를 상대방에게 송달
 - 신고소비자표를 작성: 각 신고채권의 내용 등이 기재됨

2017-11-30

PNU School of Law Seo©

37

신고채권의 인부절차

- **제22조(신고채권의 인부)** ①상대방은 신고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인부기간 내에 인부를 하여야 한다.
- ②인부기간 내에 제1항의 **인부가 없을 때에는 상대방이 신고채권의 내용의 전부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 ③상대방이 인부기간 내에 신고채권의 내용의 **전부를 인정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부를 인정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신고채권의 내용은 확정**된다.
- ④법원사무관등은 신고채권의 인부의 내용을 **신고소비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해 확정된 신고채권에 대한 신고소비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사업자의 인부에 의한 채권의 확정**
 - 전부 인정 / 인부기간 도과(전부 인정 간주) → 신고채권 확정
 - 신고소비자표의 기재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부인 → 단체의 선택에 따라 채권확정재판신청

2017-11-30

PNU School of Law Seo©

38

채권확정재판

- **제23조(채권확정재판의 신청)** ①채권확정절차단체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채권의 내용이 확정된 때를 제외하고, 신고채권의 인부에 대해 인부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1개월의 불변기간 내에 채권확정절차법원에 신고채권을 확정하는 재판(이하 “채권확정재판”이라 한다)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⑤적법한 채권확정재판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신고채권의 내용은 신고채권의 인부의 내용에 의해 확정된다.
- **제24조(채권확정결정)** ①채권확정절차법원은 적법한 채권확정재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채권의 존부 및 그 액을 확정하는 결정(이하 “**채권확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정절차단체 및 상대방(이하 “당사자”라 한다) 쌍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 ③채권확정결정을 위한 심리에서 증거조사는 서증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채권확정절차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채권확정결정에 대하여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적법한 이의의 소 제기가 없는 경우 채권확정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단체:** 사업자가 신고채권의 내용을 부인한 경우 **법원에 채권확정재판 신청** 가능 → 신청하지 아니하면 인부의 내용에 따라 채권이 확정
- **법원:** 당사자 심문+서증 → 채권의 존부 및 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함 =**채권확정결정**
- **채권확정결정에 대해 이의의 소 제기가 없으면 확정**

2017-11-30

PNU School of Law Seo©

39

이의의 소

- **제25조(채권확정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①당사자 및 신고소비자는 당사자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정결정의 송달을 받은 다음 날부터 1개월의 불변기간 내에 당해 결정을 한 채권확정절차법원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채권확정절차단체가 제1항의 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신고소비자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소비자는 채권신고를 한 당해 채권확정절차단체에 한하여 수권을 할 수 있다.
- ③채권확정절차법원은 제1항의 이의의 소 제기가 부적법한 때 또는 상대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채권의 확정을 지연시키거나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④제3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⑤제1항의 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확정결정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
- **원고적격:** 당사자(단체+상대방) + 신고소비자(개별)
 ➢ 단체의 경우 신고소비자의 별도 수권이 필요
- **사업자에 의한 이의의 소의 악용에 대한 대처:** 상대방이 특별한 이유없이 채권의 확정을 지연시키거나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 각하
- **이의의 소의 내용:** 1단계 확정판결을 전제 → **채권확정결정을 인가하거나 변경**

2017-11-30

PNU School of Law Seo©

40

보전처분

- **제27조 (원고단체 등의 가압류)** ① 원고단체 또는 채권확정절차단체는 공통의무확인소송 또는 채권확정절차와 관련하여 그 단체가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집행권원에 관련된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신청에서는 보전해야 할 권리와 관련하여 **추정되는 피해자의 수 및 전체 피해액을 밝히면 족하다.**
- ③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원고단체 또는 채권확정절차단체가 **제3자와 체결한 지급을 보증하는 계약에 관한 문서를 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 단체는 1단계와 2단계 절차에서 가압류 신청이 가능
- **가압류 신청절차를 간소화·용이화**
 - 추정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을 명시하면 됨
 - 지급보증서면으로 담보제공 가능

2017-11-30

PNU School of Law Seo©

41

화해

- **제28조(화해)** 원고단체 또는 채권확정절차단체는 소비자집단소송의 각 절차에서 **공통의무의 존부, 채권의 존부 및 채권액, 지급방법 기타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와 화해할 수 있다.
- 단체는 소비자집단소송의 각 절차에서 피해구제에 관한 모든 내용에 관하여 사업자와 화해할 수 있음 → **효율적 분쟁해결의 도모**

2017-11-30

PNU School of Law Seo©

42

소송비용 지원

- **제30조(소송비용의 지원)**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비자집단소송에 필요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비자집단소송제도 성공의 열쇠 = 원고단체
- 소비자집단소송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
 - 비용과 시간·노력이 필요한 작업
 - 국가에 의한 지원이 필요

기타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 (직권증거조사, 당사자신문, 증거보전, 소 취하 제한 등)을 준용(제8조)
- 「민사소송법」의 특칙 =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을 적용(제31조)

VI. 결론

- 1. 새로운 제안의 이유
-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를 통해 드러난 대표당사자형 제도모델의 문제점에 눈을 감아서는 안됨 = 현재 진행중인 입법론은 위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가는 것임
 - 소송의 장기화
 - opt-out형 제도의 이론적 문제점
- 소비자의 권리실현에 도움이 되는 제도모델의 설계가 필요
 - 제도도입 자체에 만족하거나 머물 것인가?
 - 제도모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가?

2017-11-30

PNU School of Law Seo©

45

VI. 결론

- 2. 소비자단체형 집단소송제도의 특징 내지 장점
- 기존제도(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활용한 제도설계
 - 소비자단체소송의 원고적격을 활용
 - 제도 도입시: 단체소송+집단소송 = 행위금지청구 + 금전지급(손해배상)청구 → 시너지효과
 - 대륙법계 국가들의 공통된 특징(경향)
- opt-out형 제도의 이론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소비자 권리실현에 배려한 제도설계
 - 변형된 opt-in 제도: 1단계 승소확정을 보고 2단계 절차에 참가 = 재판청구권 박탈문제 해결
 - 개별적 권리확정절차 마련 = 공동원인에 의한 피해라도 개별쟁점(손해액 등)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
- 유연한 제도설계가 가능 = 원고적격의 확장가능성
 - 한국소비자원 외에 공공기관(검찰 등), 지자체 등으로 원고적격 확대 가능 → 부권소송적 성격(브라질)
 - 대표당사자형도 수용가능 → 융합형 제도모델(스웨덴형)
 - 대표당사자형제도 → 이론적으로 피해자만이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음

2017-11-30

PNU School of Law Seo©

46

VI. 결론

- 3. 소비자단체형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대한 반감
- 소비자단체 등에만 원고적격을 주는 문제(피해자가 소송수행을 못하는 점)
 - 피해자는 2단계형 절차에 참가: 공통의무확인소송=책임확인소송은 법리위주의 절차
 - 융합형제도의 가능성: 대표당사자형+제3자소송담당형
 - ✓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안
- 선정당사자제도와 유사성
 - 선정당사자제도: 애초에 소송에 참가하고 있거나 참가할 자(선정자)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opt-in)에서 그럴 필요가 없는 집단소송제도보다 다수피해자 구제에 불리함
 - 변형된 opt-in제도로서의 차별화 → 1단계판결의 승소를 확인한 후에 2단계절차에 참가

2017-11-30

PNU School of Law Seo©

47

VI. 결론

- 4. 소협안과 기존 입법안과의 관계: 국회논의시 참고사항
- 대표당사자형 제도와 소비자단체형 제도의 장단점 비교가 필요함
 - 제도모델적 접근
- 기존 국회제출안 및 제출예정인 법안(법무부안·공정위안?)과 소협안은 하나의 논의의 장에서 같이 논의되어야 함
 - 제도모델이 다르다는 점에서 별도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



- 우리나라에 적합하고 다수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보다 유익한 제도 모델의 설계 = 한국형 집단소송제도의 설계

2017-11-30

PNU School of Law Seo©

48

감사합니다!

문의: kshskm@pusan.ac.kr

참고문헌

- 서희석, "의원발의 집단소송법안 비교-제19대 국회 제출 법안의 특징 및 과제", 입법과 정책 제8권 제1호(2016.6)
- 서희석, "집단소송법의 제정방향-한국형 집단소송제도의 설계", 소비자법연구 제3권 제1호(2017.3)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서희석), "일본의 소비자집단소송 제도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연구보고서(2017.7)

[발제 - 참고자료]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소협안)

소비자집단소송법안(소협안)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시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다수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소비자집단소송은 이 법에 따라 원고적격을 갖는 소비자단체 등이 제기하는 공통의무확인소송과 그 결과를 전제로 개별 피해자의 채권신고에 기초하여 채권을 확정하는 채권확정절차의 2단계로 이루어지는 집단소송임(안 제2장, 제3장).
- 다. 공통의무확인소송이란 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시설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채무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사업자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공통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거나 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공통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함(안 제2조).
- 라. 공통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여야 함(안 제3조)
- 마. 공통의무확인소송의 피고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사업자로 하되,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공통의무확인소송의 경우 당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인 사업자도 피고로 할 수 있음(안 제3조).
- 바. 공통의무확인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소관할로 하되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사. 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여러 개의 공통의무확인소송이 하나의

전속관할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법원에서 병합심리하고, 각각 다른 전속관할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먼저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서 병합심리하도록 함(안 제4조).

- 아. 공통의무확인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수, 쟁점의 공통성, 공통의무확인소송이 피해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인지 여부,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적절하고 신속히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공통의무확인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자. 원고단체는 공통의무의 존부를 증명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제출을 명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피고가 정보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원고단체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명령을 받은 정보를 멸실, 훼손, 은닉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공통의무의 존부에 관한 원고단체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안 제7조).
- 차.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은 채권신고를 한 소비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며,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다른 단체는 공통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
- 카. 피해자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고 각 피해액도 동일한 경우에는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채권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타.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수의 피해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채권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파.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단체가 피해자의 채권신고의 수권을 받아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고,

그 인부 및 채권확정재판을 통해 채권을 확정함(안 제11조, 제22조, 제23조 등).

하. 당사자 및 신고소비자는 채권확정결정을 받은 경우 1개월의 불변기간 내에 당해 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은 채권확정결정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이 되도록 함(안 제25조).

거. 원고단체는 공동의무확인소송 또는 채권확정절차와 관련하여 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27조).

너.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비자집단소송에 필요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소협안)

제1장 총칙

제2장 공통의무확인소송

제3장 채권확정절차

제4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시설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란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행위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법인 기타 단체 및 사업목적으로 행위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3. “소비자계약”이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4. “소비자집단소송”이란 이 법에 의한 공통의무확인소송, 채권확정절차 및 민사집행법에 의한 관련 민사보전 또는 민사집행의 절차를 말한다.
5. “공통의무확인소송”이란 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시설(이하 “재화등”이라 한다)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채무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사업자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공통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거나 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공통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6. “채권확정절차”란 공통의무확인소송의 결과를 전제로 법원에 대한 채권신고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재판절차로서 피해자가 상대방 사업자에게 갖는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및 내용을 확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제2장 공통의무확인소송

제3조(공통의무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등) ①다음 각호의 자(이하 “단체”라

한다)는 공통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동법 제70조 제1호 가목~다목의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다만 소비자단체의 협의체의 경우 동법 제70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소비자기본법」 제70조 제4호 나목~라목의 요건을 갖추 것

나. 소비자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할 것

②공통의무확인소송의 피고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사업자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불법행위(민법 기타 법률에서 명문으로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공통의무확인소송의 피고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사업자나 그 채무의 이행을 하는 사업자 기타 당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인 사업자로 한다.

제4조(전속관할 및 병합심리) ①공통의무확인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공통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여러 개의 공통의무확인소송이 하나의 전속관할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법원에서 병합심리한다.

④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여러 개의 공통의무확인소송이 각각 다른 전속관할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먼저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서 병합심리한다. 다만 그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당해 공통의무확인소송의 전부를 다른 전속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여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소송대리인의 선임) 공통의무확인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의 제기 등) ①공통의무확인소송의 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소송을 제기하는 단체(이하 “원고단체”라 한다)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추정되는 피해자의 범위 및 전체 피해액
4. 청구의 취지 및 원인

②공통의무확인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은 5백만원으로 한다.

③원고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장에 그 단체가 본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해당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피해자의 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피해자에게 공통되었는지 여부, 공통의무확인소송이 피해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인지 여부, 제11조 이하의 절차에서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적절하고 신속히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공통의무확인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하할 수 있다.

제7조(정보제출명령) ①원고단체가 공통의무의 존부를 증명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를 증명하기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제출을 명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정보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고에게 그 정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할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비밀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된 정보를 원고단체에게 공개하지 않고 중립적인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피고가 정보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원고단체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명령을 받은 정보를 멸실, 훼손, 은닉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공통의무의 존부에 관한 원고단체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정보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8조(소송절차) 공통의무확인소송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0조(직권증거조사), 제31조(구성원 및 대표당사자의 신문), 제33조(증거보전), 제35조(소 취하, 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제1항 및 제38조

(상소 취하 및 상소권 포기의 제한)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성원’은 ‘피해자’로, ‘대표당사자’는 ‘원고단체’로 본다.

제9조(확정판결의 효력) ①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신고소비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②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다른 단체는 공통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난 경우
2. 기각판결이 원고단체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제10조(특별지급판결 등) ①법원은 피해자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고 각 피해액도 동일한 경우에는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채권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소송참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기간과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공통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제1항 제2문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피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때에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8조에 규정하는 채권신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반복적인 위법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법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법행위의 기간·횟수 등

6. 피고의 재산상태

7. 피고가 피해자의 피해확산을 방지하거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⑤법원은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과 동시에 원고단체 또는 그 소송대리인에게 발생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제3장 채권확정절차

제11조(채권확정절차의 개시신청) ①공통의무확인소송의 당사자인 원고단체는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또는 청구의 인낙이나 공통의무의 존부에 대한 화해로 소송이 종결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1개월의 불변기간 내에 당해 소송의 제1심 종국판결을 한 지방법원(제1심에서 청구인낙이나 화해로 당해 소송이 종결된 때에는 당해 소송이 계속되고 있던 지방법원)에 당해 소송의 당사자였던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채권확정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채권확정절차 개시신청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확정절차 개시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원고단체(이하 “채권확정절차단체”라 한다)가 채권확정절차의 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제1항의 법원(이하 “채권확정절차법원”이라 한다)이 정하는 공고, 통지, 송달, 기타 필요한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④채권확정절차 개시의 신청은 채권확정절차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취할 수 없다.

제12조(임의적 구두변론) ①채권확정절차에 관한 재판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구두변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확정절차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제13조(채권확정절차의 개시결정) ①채권확정절차법원은 채권확정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1조 제3항에 규정하는 비용의 예납이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범위를 기재한 결정서로 채권확정절차의 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확정절차의 개시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채권확정절차법원은 채권확정절차의 개시결정과 동시에 피해자의 범위, 사안의 복잡성, 채권확정절차단체의 규모와 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채권확정절차단체가 제4항에 규정하는 채권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간(이하 “채권신고기간”이라 한다) 및 그 채권신고에 대해 채권확정절차의 상대방이 인부(認否)를 하여야 하는 기간(이하 “인부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④채권확정절차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권신고기간 또는 인부기간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⑤채권확정절차법원은 채권확정절차의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관보에 다음 사항을 공고한다.

1. 채권확정절차 개시결정의 주문
 2. 신고 대상인 피해자 및 채권의 종류
 3. 채권확정절차단체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4. 채권확정절차의 개요(채권확정절차단체에 대한 채권신고의 수권절차를 포함한다)
 5. 채권신고기간 및 인부기간
- ⑥채권확정절차법원은 채권확정절차단체 및 상대방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신고의 수권절차의 개시 등) ①채권확정절차단체는 피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추정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사항을 통지하여 채권신고의 수권(授權)절차를 개시한다.

1. 공통의무확인소송의 확정판결의 내용(청구인낙이나 화해로 당해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안의 내용
2. 채권확정절차의 개요(채권확정절차 신청단체가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고 아울러 채권확정절차를 수행하려면 피해자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를 포함한다)
3. 신고 대상인 피해자 및 채권의 종류
4. 채권확정절차단체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5. 신고 대상인 피해자가 채권확정절차단체에 대해 채권신고의 수권을 하는 방법(증거서류가 있는 경우 그 제출방법을 포함한다) 및 기간
6. 피해자가 신고대상인 채권에 기하여 사업자에게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고 있을 때에는 채권신고를 할 수 없다는 사실

7. 채권확정절차단체가 보수나 비용을 받는 경우 그 액수 및 산정방법
 8. 채권확정절차단체가 채권확정절차 및 관련 민사집행, 화해 등을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지급방법
 9.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상대방은 채권신고기간 중에 채권확정절차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확보하고 있는 신고 대상인 피해자의 성명, 주소 또는 연락처를 채권확정절차단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공평성실의무 등) ①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수권을 받은 채권확정절차단체는 당해 수권을 한 피해자를 위하여 공평하고 성실하게 채권확정절차 및 관련 민사집행절차(당해 수권과 관련된 채권에 관한 재판 외의 화해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고 이들에 수반하여 취득한 금전 기타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채권확정절차단체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수권계약(피해자로부터 수권을 받고 채권신고를 포함한 채권확정절차 및 관련 민사집행의 절차를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③채권확정절차단체에 수권을 한 피해자는 수권을 철회하거나 수권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채권신고기간 이후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확정절차단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하거나 내용을 변경하기 전에는 수권의 철회나 내용변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6조(채권신고) ①채권확정절차단체는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확정절차법원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를 하는 채권확정절차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채권신고서를 채권확정절차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확정절차단체, 상대방 및 채권확정절차단체에 제14조에 규정하는 채권신고의 수권을 한 피해자(이하 “신고소비자”라 한다)
2. 신고소비자의 채권액 및 청구원인(청구원인은 공통의무확인소송에서 인정된 공통의무에 관련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원인을 전제로 하는 것에 한한다)
3.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공통의무확인소송에서 제10조 제3항의 선고가 있는 경우 채권확정절차단체는 제2항 제2호의 신고소비자의 채권액을 기재하는 때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채권확정절차단체는 피해자가 신고대상인 채권에 기하여 사업자에게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고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신고대상인 채권에 관한 채권신고를 할 수 없다.

제17조(채권신고의 취하 및 내용변경 등) ①채권신고는 채권확정절차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없다.

②채권확정절차단체는 채권확정절차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신고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신고소비자를 추가할 수 있다.

제18조(부적법한 채권신고의 각하) ①채권확정절차법원은 채권신고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20조에 규정하는 채권신고서의 송달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이 없을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채권신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조(시효의 중단) 채권신고가 있는 경우 시효의 중단에 관해서는 채권확정절차의 전제가 되는 공동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제20조(채권신고서의 송달) 채권확정절차법원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서의 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채권신고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1조(신고소비자표의 작성) ①채권확정절차법원의 서기관·사무관·주사 또는 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채권신고서에 의해 신고된 채권(이하 “신고채권”이라 한다)에 대해 신고소비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소비자표에는 각 신고채권의 내용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신고소비자표의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언제든지 그 기재를 경정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신고채권의 인부) ①상대방은 신고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인부기간 내에 인부를 하여야 한다.

②인부기간 내에 제1항의 인부가 없을 때에는 상대방이 신고채권의 내용의 전부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 ③상대방이 인부기간 내에 신고채권의 내용의 전부를 인정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부를 인정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신고채권의 내용은 확정된다.
- ④법원사무관등은 신고채권의 인부의 내용을 신고소비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해 확정된 신고채권에 대한 신고소비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3조(채권확정재판의 신청) ①채권확정절차단체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채권의 내용이 확정된 때를 제외하고, 신고채권의 인부에 대해 인부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1개월의 불변기간 내에 채권확정절차법원에 신고채권을 확정하는 재판(이하 “채권확정재판”이라 한다)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채권확정절차법원은 채권확정재판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③전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법원사무관등은 채권확정재판의 신청의 유무를 신고소비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⑤적법한 채권확정재판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신고채권의 내용은 신고채권의 인부의 내용에 의해 확정된다.
-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해 확정된 신고채권에 대한 신고소비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4조(채권확정결정) ①채권확정절차법원은 적법한 채권확정재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채권의 존부 및 그 액을 확정하는 결정(이하 “채권확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정절차단체 및 상대방(이하 “당사자”라 한다) 쌍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 ③채권확정결정을 위한 심리에서 증거조사는 서증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채권확정절차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채권확정결정은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기재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 ⑤신고채권의 지급을 명하는 채권확정결정의 경우 채권확정절차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⑥채권확정결정의 효력은 제4항의 결정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⑦채권확정결정에 대하여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적법한 이의의 소 제기가 없는 경우 채권확정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5조(채권확정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①당사자 및 신고소비자는 당사자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정결정의 송달을 받은 다음 날부터 1개월의 불변기간 내에 당해 결정을 한 채권확정절차법원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채권확정절차단체가 제1항의 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신고소비자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소비자는 채권신고를 한 당해 채권확정절차단체에 한하여 수권을 할 수 있다.

③채권확정절차법원은 제1항의 이의의 소 제기가 부적법한 때 또는 상대방이 특별한 이유없이 채권의 확정을 지연시키거나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확정결정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

제26조(소 변경의 제한 등) ①채권확정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소의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채권확정절차단체가 원고가 되는 경우 신고소비자 또는 청구액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소의 변경을 할 수 있고, 신고소비자가 원고가 되는 경우에는 청구액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소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소에 대하여는 반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장 보칙

제27조 (원고단체 등의 가압류) ①원고단체 또는 채권확정절차단체는 공통의 무확인소송 또는 채권확정절차와 관련하여 그 단체가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집행권원에 관련된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서는 보전해야 할 권리와 관련하여 추정되는 피해자의 수 및 전체 피해액을 밝히면 족하다.

③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원고단체 또는 채권확정절차단체가 제3자와 체결한 지급을 보증하는 계약에 관한 문서를 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화해) 원고단체 또는 채권확정절차단체는 소비자집단소송의 각 절차에서 공통의무의 준부, 채권의 준부 및 채권액, 지급방법 기타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와 화해할 수 있다.

제29조(소송수계) 원고단체 또는 채권확정절차단체가 공통의무확인소송, 채권확정절차 및 관련 민사집행의 절차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의 단체 중 법원에서 허가하는 단체가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

제30조(소송비용의 지원)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비자집단소송에 필요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①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②소비자집단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적용례) 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제기되는 소비자집단소송부터 적용한다.

[토론 1]

토 론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제언-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위한 제언

박경준변호사

1. 사회현상(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발생 그리고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 등 동일한 유형의 수많은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기에는 현재의 소송제도로는 부족하다며 이러한 사회현상들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현대의 기업들은 자동화된 설비로 다량의 제품을 값싸게 생산하고 있고 다수의 국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의 편의성에 만족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품생산 및 유통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한 제품의 하자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거래를 통해 알려지게 되는 자신에 대한 정보에 대한 노출의 위험에도 그대로 방치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더 이상 이러한 집단적인 대규모 동일한 피해발생을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를 방치하게 되면 기업들은 또 다시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소액의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그런 사회현상에 모두 무감각해지면 결국 피해구제없는 피해발생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발생현상에 대한 구제로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이러한

사회현상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이 반영된 집단소송제도의 제정이 필요하다.

2. 적용범위(어떤 피해유형에 대해 집단소송제도를 이용하게 할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집단적인 피해는 비단 증권 및 금융거래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신체 및 건강에 대한 집단적인 피해발생, 개인정보의 유출에 따른 집단적인 피해 발생하는 경우 등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 걸쳐 집단소송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각에서는 집단소송이 벌어질 개연성이 높은 거래를 예정하여 특정한 법률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집단소송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실효적이고 유효적절하다고 주장하나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러한 사회현상에 대한 피해구제책으로 집단소송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열거방식보다는 일반법으로 집단소송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법으로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면 남소의 우려와 그로인한 기업활동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기업은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에 입각해 경제활동을 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위법행위까지 기업경영의 위축을 내세우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남소가 우려된다는 주장은 이미 위법행위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

면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한 피해자들은 각자 가해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예정된 소송이 하나의 소송으로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중복된 동일한 수백건의 소송을 피하는 방안이 집단소송제도라고 볼 수 있으므로 남소를 우려하는 주장은 결국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소송수행상의 어려움으로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현재의 소송제도의 난점을 이용하려는 기업의 내심의 의사에서 발현된 주장이라고 이러한 우려 때문에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고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3. 판결의 효력(소송을 통한 피해구제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각국의 입법례가 다양하고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와 관련하여 소송참가의사를 밝힌 당사자에 한하여 판결의 효력을 미치도록 하는 opt-in방식과 제외신고를 한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피해자군에 대하여 모두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opt-out방식이 있는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회현상과 집단적인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점에서는 opt-out방식으로 일거에 모든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도록 할 필요성이 높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opt-out방식이 소송법상 판결의 효력에 대한 기판력과의 충돌 문제나 헌법상의 재판청구권과 충돌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기판력과 관련하여 집단소송법이 제정되면 그 법에 따라 판결의 효력을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 기판력의 효력을 정하면 될 것이고, 재판청구권은 본

인이 적극적으로 재판을 하고자 할 때 제외신고의 방식으로 권리보전이 되기 때문에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우려가 적으며, 특히 소멸시효로 인해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자의 재판청구권은 실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당사자의 권리침해의 문제는 발생할 우려가 매우 적다고 사료된다.

4.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소송법적 고찰

가. 법원의 허가요건의 명확화와 허가결정기한의 설정

집단소송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통해 그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되 소송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집단소송제도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송허가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법원의 허가를 통해 소송절차가 진행되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효적인 보장을 위해 허가결정기한을 설정하여 일정한 기한 내에 집단소송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입증책임의 전환 또는 완화

집단적인 소액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의 경우 대부분의 증거가 가해기업의 영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구제를 받고자 소를 제기한 자는 피해원인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데 이를 일반적인 입증책임의 문제로 접근하면 결국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실효적인 권리구제에 치명적인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완화시켜 피해자의 권리구제로서의 집단소송제도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 인지부담의 경감

집단소송제도를 통한 권리구제는 당사자 본인의 권리구제를 넘어서 피해 발생현상에 대한 전체 피해자 총원의 권리구제라는 공익적인 측면이 소송에 반영되는 것인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 본인에게 인지액을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결국 집단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집단소송을 통해 총원의 권리구제에 나서는 당사자에게는 인지액을 일정금액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인지부담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다.

라.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등에 대한 감독강화

집단소송은 결국 대표당사자가 피해를 입은 총원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므로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당사자의 배임적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총원의 이익저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감독기능의 강화가 필요하고 이에 더불어 소송대리인이나 분배관리인도 위임업무의 수행에 있어 소송계속중 또는 판결 후에 불법행위가 개입되어 총원의 이익저해행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강력한 법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결 어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사회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 그 법과 제도는 가장 실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집단소송법도입이 논의되는 것은 현재의 재판절차를 규정하는 민사소

송법이 소액다수의 피해자구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보완을 넘어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소 과격적일 수는 있지만 집단소송법이 이미 벌어진 사회현상에 대하여 권리구제절차를 정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본다면 어떤 절차규정으로 정립되든지 당연히 구제될 피해의 회복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일반법상 담을 수 없는 절차규정까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토론 2]

토 론

최승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

토론문

최승재 변호사(대한변협법제연구원장)

1.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은 프랑스나 일본에서 도입한 2단계집단소송을 바탕으로 한 제도설계로 보입니다.(이에 대한 이해를 위한 소개는 **첨부의 토론자 법률신문 기고문 참고**) 이는 우리 법제도를 감안한 제도로서 기존의 증권집단소송과는 구별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증권집단소송은 미국식의 집단소송으로 소위 옵트 아웃(opt out) 방식을 취해서 기판력을 확장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19대 및 20대에서 발의되어 국내에서 최근 논의되는 일련의 집단소송법은 기존의 증권집단소송을 모방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협안은 이런 경향성을 벗어나서 2단계집단소송을 도입하려고 하는 시도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변협도 3월에 국회에서 포괄적 집단소송법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식 제도를 모태로 하되 기존의 증권집단소송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증권집단소송은 최근 결정된 **서울고등법원 2016라 21279 결정 (집단소송의 허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가결정 자체가 매우 쉽지 않고 그 외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활용도가 저조합니다.(이에 대해서는 토론자 외, 증권집단소송개정론, 법률신문사 2013 참조)

대한변호사협회는 **포괄적 집단소송법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1년간의 연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2단계집단소송**도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증권집단소송을 수정하는 방향을 취했습니다. 사실적인 면에서는 이미 상당기간 집단소송 제도가 운영되어 왔고 법원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기 보다는 기존 제도의 운용을 더 잘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과 기존 집단소송법도 일부 법조항의 개정이 있으면 분명히 장점이 있는 제도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는 토론자를 포함한 변협 법안 참조)

3. 하지만 소협의 2단계집단소송법안은 일본 법제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긍정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 변협은 증권집단소송, 공정거래집단소송, 소비자집단소송 이런 식의 파편화된 집단소송 대신 포괄적으로 제조물집단소송 이건 환경집단소송이건 유형을 가리지 않음으로써 소위 **행정적 차익(administration arbitrage)**의 발생을 막고 효율적인 소송절차의 진행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민한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업이었기 때문에 변협안을 택한 것인 반면 소협안은 소비

자집단소송에만 중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협의 소비자집단소송은 이 법에 따라 원고적격을 갖는 소비자단체 등이 제기하는 **공통의무확인소송**과 그 결과를 전제로 개별 피해자의 채권신고에 기초하여 채권을 확정하는 **채권확정절차**의 2단계로 이루어지는 집단소송으로서(안 제2장, 제3장)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를 듣고 개별적인 의견을 시간이 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관할에 대한 인식을 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소협안은 공통의무확인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¹⁾관할로 하되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안 제4조). 집단소송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매우 행정적인 부담이 되는 소송이지만 이런 어려움은 법원의 입장에서조차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에서 변협도 소협안 제4조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를 병존적 전속관할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어떤 방식으로 집단소송이 입법되더라도 관철되었으면 합니다.

1) 발표자료에는 전소관할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타로 보입니다.

법률신문

연구논단

2단계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소고

최승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 입력 :

1. 도입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도입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외에 추가적으로 공정거래분야와 같은 다른 분야에서도 집단소송제도 도입논의가 있다. 필자가 법제연구원장으로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도 2017년 3월 포괄적 집단소송법안을 국회공청회에서 발표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폭스바겐 연비사건 등 집단소송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사건들이 발생한 지금은 어찌 보면 집단소송을 논의할 적기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다수의 제도 도입 논의는 일단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필요하면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소모적인 논쟁으로 제도 도입 자체가 무산되었다. 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된 제도가 도입되어 우리 사회 전체의 후생증대에 기여하는 제도가 도입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글을 쓴다.



지금 미국식 집단소송 외에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에서 소비자집단소송의 제정을 회원국에 요구한 결과, 이미 입법된 프랑스와 영국 외에 독일도 법무부의 주도하에 집단소송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독일의 집단소송제도는 기존 자본시장모범집단소송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고 있다.

집단소송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도입된 변형된 미국식의 집단소송제도 외에 대륙법계 국가인 일본과 프랑스에서 이미 도입된 2단계 집단소송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식 제도로 도입을 검토해볼 실익이 있다고 보여서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일본의 소비자집단소송

가. 입법연혁

일본은 2013년 12월 11일 소비자집단소송을 도입하였다. 일본의 경우 소비자가 소비자 계약의 취소 및 소비자 계약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정한 소비자계약법이 2001년부터 시행되었다. 2006년 6월 7일 공포된 '소비자계약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소비자단체 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 2007년 소비자계약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되어 2007년 6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 단체소송도입 당시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은 적격소비자단체가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동시에 피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자계약법상 부당행위 및 경품표시법에서의 부당표시, 특정상거래법에서의 부당행위, 식품위생법상 부당표시 등에 관하여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2008년 소비자계약법이 개정되면서 경품표시법상 상품의 부당표시와 특정상거래법상의 부당행위에도 금지청구가 허용되었다. 하지만 손해배상제도가 없는 단체소송의 실효성은 한계가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일본판 클래스 액션(Class Action)이다. 이법의 정식명칭은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와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대한 법률’(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の特例に?する法律, 平成25年 法律第96?)이다. 이 법의 제정과정에서 일본 기업들은 남소의 위험을 들어서 격렬하게 반대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적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청구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입법되었다. 일본은 1978년부터 집단소송법안이 제안되었으나 실제 입법은 2013년에야 이루어졌다(일본에서의 논의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희석, ‘일본에서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창설’, 고려법학 제74호(2014) 참조).

나. 소비자집단소송

2013년 12월 11일 일본에서는 소비자집단소송을 통한 피해구제제도가 도입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도 이전에는 중지청구만이 가능하도록 하는 우리나라의 현행제도와 같은 제도로 운용되다가 이 법의 개정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졌다. 도입된 방식은 미국식의 제외신고방식(opt out)이 아니라 가입방식(opt in)으로 도입되었다. 일본의 집단소송제도는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브라질이 1985년 도입한 2단계집단소송 제도를 바탕으로 제도설계가 되었다고 한다.

2013년 도입된 일본 집단소송의 특징은 소비자단체에 의한 위법성의 판단단계(공통의무확인소송, 지급의무의 존부판단) 및 개별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단계(간이확정절차, 손해액 산정)로 구성된 2단계형 제도로 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일본의 제도는 브라질의 2단계형 집단소송제도를 큰 틀에서 참고하고 소송주체가 소비자단체에 한정된다는 등의 일본적 특성을 가미하였다.

1단계인 공통의무확인소송이란, 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상당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 피해에 대하여(다수성), 이들 소비자에 공통되는 사실상 법률상의 원인에 기하여(공통성), 개개의 소비자의 사정에 의해 그 금전의 지급청구에 이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자가 이들 소비자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제2조 제4호). 일본최고재판소는 2015년 6월 29일 집단소송의 세부절차에 대한 규칙([最高裁規則]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の特例に?する規則)을 제정하였다. 이 규칙의 제2조부터 제5조는 제1단계 공통의무확인소송의 소장 기재사항, 재량이송, 변론의 필요적 병합의 신고방식, 화해의 경우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 제5조는 공통의무확인 소의 소장에는 대상채권 및 대상소비자의 범위를 기재하고,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을 특정하도록 요구한다. 소장 기재사항으로 대상소비자들 간 관할이 서로 다를 수 있고, 1단계소송 개시 시에는 단체가 그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할 것이므로 소장에는 그 예상되는 수만을 기재하면 족한 것으로 하고 있다. 법에서도 이런 경우를 상정하여 대상소비자수가 1000명 이상으로 전망되는 경우 동경지방법원 또는 오사카지방법원에도 공통의무확인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6조 제4항).

2단계인 간이확정절차는 대상채권의 확정절차(?象債?の確定手?)이다. 2단계 절차에서는 1단계 소송에서 확정된 공통쟁점에 대한 판결을 전제로 하여 개별적인 대상소비자에 대하여 개별쟁점을 심리하여 개별 소비자에게 귀속될 대상채권의 존부 및 금액을 확정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원고청구 인용이 되거나 인용취지의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1단계 공통의무확인소송의 결과에 다른 소송절차가 개시된다. 이때 1단계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에게 모두 미치지만, 2단계의 절차에 있어서는 채권을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친다.

3. 프랑스의 소비자집단소송

가. 입법연혁

프랑스에서는 19세기 말부터 직업조합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여 왔고 이런 전통은 소비자법 분야에서도 소비자단체소송이라는 형식으로 발전하였다.

2004년 자크 시라크(Jacques Chirac) 대통령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혁을 공표하면서, 이에 따라 2006년 참가신청형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되, 남소 방지를 위해 변호사의 승소사례금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재계의 반대, 정치권의 의견 대립 등으로 인해 2012년 11월까지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2011년 12월 프랑스에서 성형용 실리콘 사건 등 다수의 소비자들이 피해자가 되는 사건이 생겼다.

나.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도입

프랑스는 2014년 3월 17일 법 개정을 통해서 소비자법(Code de la consommation, La Loi n°2014-344)의 일부로 소비자집단소송을 도입하였다. 프랑스 소비자법은 소비자집단소송 외에도 소지의무, 방문판매와 원격판매, 프랑스 경쟁청의 소비자관련 사안에 대한 권한 확대 등의 내용도 규정하였다. 프랑스 사법원이 2014년 3월 13일 소비자법상 집단소송규정을 합헌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집단소송제도가 프랑스법의 일부로 도입되었다. 이 법은 2014년 9월 24일 공포·시행되었다(Decree n°2014-1081).

2014년 도입된 소비자단체소송(이하 L. 423-1)은 책임에 관한 판결(Jugement sur la responsabilité)을 위한 절차와 간이한 그룹 소송절차(Procédure d'action de groupe simplifiée)의 2단계로 구분된다. 소비자에 대한 배상조건은 '책임에 관한 판결'에서 규정되는데 사업자에 의한 직접 지불도, 소비자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를 지원하는 사람에 의한 간접적 지불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일단 책임에 관한 판결을 통해서 사업자의 책임이 인정되면, 개별적 이행소송이 진행된다.

프랑스의 소비자단체소송은 참가신청(opt-in)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 소비자법 423-10조의 3문은 소비자들이 배상에 승낙(accepte) 하였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참가신청을 하지 않으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개별소비자들의 신원과 수가 모두 확인되고, 동일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간이확정절차가 진행된다. 법원은 사업자의 책임을 확정된 후에 직접 사업자로부터 개별소비자들에게의 배상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L. 423-10조).

[토론 3]

토 론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관련 토론요지-

강석구 팀장(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관련 토론요지

강석구(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

폭넓은 논의 기회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집단소송 관련 법률안은 미국식 대표당사자제도(class action)를 전제하고 있음. 발표안은 미국식 집단소송제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효과적 방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함.

소비자 피해의 효과적 구제와 사전예방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제계도 공감. 소비자 권리 신장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 특히 제도 미비에 따른 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안 됨.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1) 소송경제 및 권리구제의 용이성, (2) 불법행위의 반복 억제 및 예방효과, (3) 부정기업의 퇴출 등 장기적 관점의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의 장점을 들고 있음. 단점으로 (1) 집단소송 비참여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문제, (2) 소송대상에 따른 구성원 특정의 어려움, (3) 남소로 인한 기업부담 증가 등이 있음¹⁾.

발제문은 2단계형 제도모델, 즉 1단계 공통의무확인 소송과 2단계 opt-in 방식의 대상채권확정 절차를 구분하여, 1단계에서 총액판결형 또는 급부이행판결형에 따른 금전청구의 부담에서 벗어나 법리에 보다 충실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발전적인 모델로 볼 수 있음.

1) 20대 국회발의된 집단소송 관련 법안 입법검토보고서

원고적격을 소비자단체 등에 한정하는 내용은 최근 집단소송제를 도입한 프랑스와 일본의 제3자 소송담당형 모델 유형으로 소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미국 상공회의소(U.S.Chamber of Commerce) 부설 법률연구소(ILR)에 따르면 opt-in 방식이 미국식의 opt-out 방식에 비해 악의적인 소송을 저지하고 모든 집단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어 우수한 절차라고 평가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제 도입 자체에 대해 기업들 우려 있음. ILR도 미국의 강력한 집단소송 형태가 아니더라도 집단소송 자체는 본질적으로 남용의 위험성과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 소송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고, 최근 대법원, 공정위 등을 중심으로 법집행수준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위법행위는 바로잡아야 하지만 한꺼번에 여러 규제가 도입되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음. 소송대응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기업경영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음.

남소 우려에 대해서는 지나친 기우일 수 있으나, 기업이 걱정하는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함. 소비자 입장에서선 선의의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은 원치 않을 것임. 제안된 안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함.

(1) opt-in 방식이 악의적인 소송을 저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남소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임

2) Response of the United States Chamber Institute for legal reform to the consultation on Collective Redress(2011년)

소비자단체 또는 비영리단체가 여론에 떠밀려 소송 수행할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움. 또한 소송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원고단체에 소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지원이 가능(안 제30조)하도록 함으로써 소송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소송남용을 부추길 수 있음. 원고에게 금전적으로 잃을게 없는 소송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현행 집행 체계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2) 신체, 생명 등 침해에 따른 확대손해까지 포함하는 것은 집단 소송 제도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

집단소송제는 공통의 원인으로 인한 소액·다수피해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구제 목적에 있음. 원고적격을 소비자단체로 한정하고, 피해자 소송관여도 opt-in 방식을 도입한 일본, 프랑스는 ‘재산적 손해’에만 집단소송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제안된 안은 사실상 신체/생명상 피해까지 확대한 것으로 이해됨(안 제2조 정의규정, 안 제10조 특별지급판결 등). 신체, 생명 등 침해에 따른 피해는 재산상 피해에 비해 규모와 심각성이 클 것으로 추정되고 양상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소액 다수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 도입 취지에 적절하지 않으며 또다른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음. 신체, 생명과 관련된 중대 사건을 공론화하고 이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지만, 집단화 보다는 개별소송으로 이뤄지는 것이 실질적 권리구제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3) 정보제출명령 규정(안 제7조)에서 정한 정보 미제출에 따른 공통의무 존부에 관한 원고단체 주장진실 간주 규정은 재검토 필요성 있음

정보 미제출 사유만으로 공통의무 존부라는 요증사실(要證事實)에 대해 원고단체의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으로 다소 과잉 입법적 측면이 있음

(4) 현행 공동소송, 선정당사제도를 보완해 나가면서 제도 도입의 실익을 따져 나가는 것이 바람직.

현재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 운영 중(*집단분쟁조정 제도, 공동소송, 선정당사자제도, 소비자단체소송 등). 기존 제도는 절차가 복잡하며, 승소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합리적인 지적이나 제도 활용에 불편함 때문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새로운 제도를 선불리 도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그리고 집단적 분쟁 사건에 대해 소송으로 가지 않고 조정이나 중재 등을 통하는 것이 비용/시간/노력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며, 절차적인 면에서 소송에 앞서 이러한 선행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아울러 집단소송제를 허용하면서 현재의 과징금제도, 형벌규정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형사, 행정제재 수단을 그대로 두면서 민사수단만 강화된다면 최적 집행수준을 초과할 위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함 <끝>

[토론 4]

토 론

김정환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1.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는 중요한 권리이나 개개인에게 흩어져 있어 효율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여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다양한 법률안이 제출되었으며 20대 국회에서도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집단소송법안, 소비자집단소송법안 등 집단소송에 관한 다양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안들은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증권관련 집단소송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집단소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비추어볼 때 오늘 교수님의 발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과는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을 통한 통찰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발표문을 읽고 지정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분야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여 깊이 있는 지정토론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하에서는 다만 발표문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 몇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지정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2. 집단소송에서 제외신고형(opt-out)을 택할지 혹은 참가신고형(opt-in)을 택할지는 집단소송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뜨거운 논쟁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¹⁾ 제외신고형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참가신고형을 택할 경우 집단의 규모가 제외신고형을 택할 때보다 훨씬 작아진다는 점에서 제외신고형의 장점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²⁾ 이러한 주장은 실증적인 결과로도 뒷받침되는데 참가신고형의 경우 제외신고형에 비해 형성되는 집단의 규모가 40-70%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³⁾ 제외신고형의 경우 거의 99% 이상의 집단구성원이 참여하게 된다고 합니다.⁴⁾ 결국 제외신고형을 택할 경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는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어 심리되는 것을 예방하고, 당해 소송에 대한 공적인 관심을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소송진행 및 피고에 대한 압박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고 합니다.⁵⁾ 반면에 참가신고형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집단소송에서

1) Scott Dodson, *An Opt-In Option for Class Actions*, 115 Mich. L. Rev. 171, 184 (2016).
 2) John Cronsteen, *Class Action Settlements: An Opt-In Proposal*, 2005 U. Ill. L. Rev. 903, 906, 909 (2005).
 3) Bruce I. Bertelsen et al., *Note, The Rule 23(b)(3) Class Action: An Empirical Study*, 62 Geo. L.J. 1123, 1150 (1974).
 4) Theodore Eisenberg & Geoffery Miller, *The Role of Opt-Outs and Objectors in Class Action Litigation: Theoretical and Empirical Issues*, 57 Vand. L. Rev. 1529, 1548 (2004).
 5) John C. Coffee Jr., *Class Action Accountability: Reconciling Exit, Voice, and Loyalty in*

집단의 구성원들은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대신 집단의 구성원으로 가입하는 것이므로 명시적인 집단에의 참가 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며 제외신고형의 경우 이러한 요소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⁶⁾ 또한 효율적인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참가신고형을 택한다고 하여도 제외신고형과 마찬가지로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성된 집단의 경우 개개인의 집단에의 참가에 대한 명확한 동의에 근거하여 집단이 구성되므로 그 성립의 정당성 또한 더욱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⁷⁾ 또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제외신고형 옹호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집단의 규모가 큰 것이 반드시 장점일 수는 없으며 오히려 근거가 약한 청구를 가지고 화해를 종용하는, 일종의 협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⁸⁾

3. 위의 논쟁에서 양자의 주장은 각자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어느 한 가지 제도모델이 모든 유형을 망라할 수 있고,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보다는 집단이 형성되는 사유가 다양하며, 일률적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양자는 택일의 관계에 있다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⁹⁾
4. 발표문에서는 부권소송이 대표당사자형 집단소송제도와는 이론적으로 병용 곤란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발표문 44페이지). 그러나 미국의 판례는 부권소송의 제기자인 주법무부장관이 피해자 총원을 위해 대표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방법에 관련된 사안에서 주법무부장관이 대표당사자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¹⁰⁾ “부권적 지위에서 소를 제기하는 주정부는 대표당사자소송의 허가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시하는 판례¹¹⁾가 있는 등 나름 대표당사자형 집단소송제도와 부권소송 사이의 이론적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보충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법안에서는 최대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손해액의 3배를 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며, 만약 그러하다면 사업자는 자신의 이익이 큰 방향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므로 범위만 행위를 계속해서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목적 중 하나가 징벌수수를 통한 사업자의 범위만 행위의 유인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라

Representative Litigation, 100 Colum. L. Rev. 370, 380, 421 (2000).

6) Debra Lyn Bassett, *Class Action Silence*, 94 B.U. L. Rev. 1781, 1783 (2014).

7) 노르웨이의 경우 참가신고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과는 달리 국토가 좁은 노르웨이의 특성상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효율적으로 통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Ot. prp. nr. 51 25.5.1.2(Nærmere om utvalgets begrunnelse) (2004-2005) available at <<https://www.regjeringen.no/no/dokumenter/otprp-nr-51-2004-2005-/id397198/sec1>> (last visited: 2017. 11. 27.)]

8) Deborah R. Hensler, *The Globalization of Class Actions: An Overview*, 622 Annals Am. Acad. Po. & Soc. Sci. 7, 25 (2009).

9) Scott Dodson, *An Opt-In Option for Class Actions*, 115 Mich. L. Rev. 171, 188 (2016).

10) *State Teachers Retirement Bd. v. Fluor Corp.*, 73 F.R.D. 569, 572 (S.D.N.Y. 1976).

11) *In re Edmond*, 934 F.2d 1304, 1313 (4th Cir. 1991).

고 할 때 손해배상액을 3배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인도 대법원은 “절차법상의 당사자주의에 집착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의와는 어긋나는 결론에 도달할 위험이 있으며 필요하다면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새로운 절차를 창설할 필요 또한 존재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¹²⁾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혹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권리보호의 요구는 계속 발생할 것이고 그에 부응하는 절차의 마련 또한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수님의 발표를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정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2) *Bandhua Mukti Morcha v. Union of India*, A.I.R. 1984 S.C. 802.

[토론 5]

토 론

남동일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illegible]

[토론 6]

토 론

김봉진 검사(법무부 상사법무과)

[illegible]

종 합 토 론 및 질 의 응 답

[illegible]

